

# ‘광프리카’ 탈출 ... 광주 ‘온도 1도 낮추기’ 시민운동

〈광주+아프리카〉

### 10대 시민 행동 수칙 정하고 5개 자치구에 예산 배정 여름철 그늘 많은 나무 식수 등 체계적인 대책 세워야

광주시가 주요 도로에 물을 뿌리고, 숲 터널을 조성하는 것은 도시 외곽에 비해 건물이 밀집해 있는 도심의 ‘열섬현상’이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늘이 부족하다. 아스팔트의 복사열까지 더해져 보행자들은 “숨이 막힐 정도로 덥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광주시는 도심 나무심기와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광주의 여름철 온도를 1°C가량 낮추는 캠페인을 추진하고, 횡단보도 주변에 임시 그늘막을 설치하는 등 무더위와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있다.

◇광주시 물뿌리고, 숲 조성하고=올 여름 광주에서는 9명이 무더위 속에서 열사병, 열실신 등의 온열질환으로 응급 의료기관으로 옮겨졌다. 지난 6년간 전국적으로 6364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해 64명이 사망하였으며, 이중 광주시는 온열질환자 281명 발생, 3명이 사망했다.

광주시가 올 여름 예산 2000만원(15일 분)을 들여 물을 뿌리기 시작한 것은 그동안 여름철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온열질환이 도심에서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스팔트를 깔고 콘크리트 벽을 높게 세웠던 도심이 시간이 갈수록 농촌에 비해 기온상승에 더욱 취약한 구조가 되고 있는 셈이다.

광주지역은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바나나 열매가 열리는 지역으로 주목을 받는 등 대구와 함께 전국 대도시 가운데

- 10대 시민 행동 수칙**
- ①안 쓰는 플러그 뽑기
  - ②가까운 거리 걷기
  - ③자전거 타기
  - ④대중교통 이용하기
  - ⑤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 ⑥일회용품 줄이기
  - ⑦쓰레기 분리 배출하기
  - ⑧녹색 식탁 만들기
  - ⑨물 절약 생활화하기
  - ⑩1인 1나무 심고 가꾸기

를칠 거운이 가장 높은 곳으로 손꼽힌다.

이에 광주시는 대대적으로 ‘광주 온도 1도 낮추기’ 시민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 운동을 통해 10대 시민 행동수칙으로 ▲안 쓰는 플러그 뽑기 ▲가까운 거리 걷기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일회용품 줄이기 ▲쓰레기 분리 배출하기 ▲녹색 식탁 만들기 ▲물 절약 생활화하기 ▲1인 1나무 심고 가꾸기를 추진하고 있다.

또 올 여름 광주시는 5개 자치구에 1000만~3000만원씩, 총 1억1000만원의 예산을 긴급 배정, 도심교차로 그늘막

설치 등을 시행토록 했다.

◇임시방편 보다는 체계적인 대책을=광주시의 여름철 살수와 숲터널 조성 사업이 무더위를 식혀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피할 수 없다. 물을 뿌리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임시방편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전체 도시의 면적이 넓어 이론적으로도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출 수 없고, 살수 후 일시적으로 습도가 되레 높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반면, 경기도 수원시는 지난 2013년 광고 신도시에 빗물을 활용한 ‘자동노면살수 시스템’을 도로에 설치했다. 저류조에 모인 4500t 규모의 빗물을 여름철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릴 경우 노면에 뿌려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방법이다. 광고 신도시에는 빗물을 저장해 재활용할 수 있는 빗물 저류조가 7곳(1만7490)에 설치돼 있다.

시민의 통행이 빈번한 광장과 통행로 등에 대부분 아스팔트나 보도블록, 박석(薄石)을 깔 점도 문제로 손꼽히고 있다. 돌이나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블록의 경우 복사열 탓에 불쾌감마저 드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금남공원 등 그나마 도심 곳곳에 자리잡은 일부 소공원이나 횡단보도 인근에 심어진 나무도 소나무여서 도심 속 ‘나무 그늘’도 부족하다.

도시 조정 전문가들은 “무작정 나무만 심을 게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온도 상승을 감안해 여름철에는 충분한 그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조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B-1B 랜서 2대 한반도 상공 무력시위 미국 전략무기인 장거리폭격기 B-1B 랜서 2대가 30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발사에 대응해 한반도 상공에 출동해 대북 무력시위 비행을 했다. 30일 공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태평양 광의 엔드스 공군기지를 이륙한 B-1B 2대는 제주 남방 해상을 거쳐 경기 오산 상공에 진입한 다음 서해 북쪽 상공 쪽으로 빠져나갔다. /연합뉴스

## 대화 요구에 ‘미사일’ 화답 文, 대북 선택지 좁아졌다

### 대화보다 압박 무게중심 이동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추가 발사로 대북 해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만 가고 있다.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해 즉각적으로 초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는 있으나, 그동안 표방해온 대북 구상이 먹이지 않는 답답한 국면이 조성되고 있어서다.

문 대통령이 이달 초 이른바 신(新)베를린 선언을 통해 대북 화해기조를 명확히 한 데 이어 남북 군사회담과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미사일 발사로 화답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일단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문 대통령의 대북전략 무게중심은 ‘대화’보다는 ‘압박’에 놓일 수밖에 없다.

당장 유엔안보리 이사회 소집을 통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는 물론 대한민

국의 독자적 대응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사드 추가배치와 한미 미사일 협정 등이 상징적인 조치다.

문제는 북핵 상황을 근본적으로 타개할 카드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문제다. 북한이 대화 요구를 뒤로하고 도발 수위를 올리는 국면이 반복되면 문 대통령으로서도 강경책을 내놓는 것 외에 달리 묘안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제재와 압박의 이면에서도 대화와 협상을 모색하는 ‘투 트랙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더라도 결국은 대화를 통해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기본적인 인식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어떠한 카드로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 위기를 극복하고 베를린 구상의 모멘텀을 이어가면서 북핵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이번 도발이 한중 관계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대북 대응 카드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지시하자 중국은 즉각 “엄중한 우려”를 언급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당장 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한중 수교 25주년인 다음 달 하순 중국에서의 정상회담에 비상이 걸렸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성능 개량을 통해 수도권 영공방어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수도권 영공방어의 핵심인 서울 인근 공군 패트리어트 포대를 방문해 “패트리어트 성능 개량을 통해 수도권 영공방어 능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우리의 독자적인 북한 핵·미사일 대응 체계를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사법개혁 완성 새 대법원장 후보군 윤곽

### 박시환 ‘대세’... 전수안·이인복 ‘대항마’

문재인 정부에서 사법개혁을 완성해 나갈 차기 대법원장 후보군이 전직 대법관 중심으로 좁혀지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 박시환 전 대법관 ‘대세론’이 퍼지는 가운데 전수안·이인복 전 대법관이 ‘대항마’로 거론되는 모양새다.

30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9월25일 교체되는 대법원장 후보로 박시환(64·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인하대 로스쿨교수)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박 전 대법관은 법원은 물론 변호사업계에서도 두루 지지를 받는다. 그는 이달 21일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사법평가위원회 위원 30명이 투표로 선출한 대법관

후보 추천자 명단 맨 앞에 이름을 올렸다. 판사 시절과 대법관 시절 소신 있는 판결을 내놓아 후배 법관들의 신뢰를 받는다. 문 대통령이 원하는 사법개혁 의지는 물론 강한 실행력과 조직 장악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다.

‘대세론’에 맞설 인물로는 전수안(65·8기)·이인복(61·11기) 전 대법관이 거론된다.

전 전 대법관은 박 전 대법관과 함께 ‘독수리 5형제’로 불리며 진보적 대법관으로 분류됐던 인물이다. 재판에서 당사자의 입장을 세심히 배려하면서도 엄정한 법 적용을 거쳐 형을 선고한다는 평가

를 받는다.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관련 조항 등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 개혁 성향으로 분류된다. 서울고법 형사부 재판장일 때 분석회계 첫 실행 사례를 남겼고, 임창욱 대상그룹 회장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판결을 내려 재수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전 전 대법관이 지명될 경우 ‘최초의 여성 대법원장’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 전 대법관은 소탈하면서도 온화한 성품으로 후배 법관과 법원 직원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실력 면에서도 대법원장 자질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이 밖에 박병대(60·12기) 전 대법관과 김용덕(60·12기) 대법관도 일각에서 거론된다. /연합뉴스



박시환 대법관

광주일보 65 광주일보 연중 캠페인 | 빈병, 반환하고 환볼받아요!

빈병 반환으로 환경 살리고! 보증금 받고! 빈용기 보증금 제도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을 마시고 소매점에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 1월 1일 생산된 제품부터 빈용기 보증금이 인상됩니다

대상용량	규격	2016. 12. 31. 까지 출고된 용기(2016년 12월 31일 기준)	2017. 1. 1. 부터 출고된 용기(2017년 1월 1일 기준)	비고
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2)호에 따른 제품	190ml 미만	20원/개	70원/개	소형 마-라이 등
	190ml 이상 400ml 미만	40원/개	100원/개	소주, 맥주(소형), 청량음료 등
190ml 이상 1,000ml 미만	400ml 이상 1,000ml 미만	50원/개	130원/개	맥주(대형) 등
	1,000ml 이상	100원 이상 300원 이하/개	350원/개	대형 청주 등

면적 150% 확대 색상 변경

2016년 12월 31일 이전 생산된 제품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도 **인상 전 보증금**으로 반환됩니다. 라벨이 훼손되거나 이탈되어 보증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제품은 인상 전 보증금으로 반환됩니다.

환경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보해양조

빈용기보증금 상담전화 1522-0082 www.kora.or.kr